

19대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여야 격돌

‘박근혜 때리기’ vs ‘박지원 수사’ 맹공

김동철·황주홍 의원, 한일군사협정 물의 고교 선배 김황식 총리 사퇴 촉구

제19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은 정치 공세로 시작했다. 18일 대정부 질문에 나선 여·야 의원들은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 때리기와 민주당 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검찰 수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대통령 측근비리 등과 같은 정치 현안에 대한 자기 주장을 펴기에 나섰다.

총공세에 나서자 여당 의원들은 박지원 원내대표 검찰수사로 응수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해 전날 검찰 소환통보를 받은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소환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민주당은 “야당탄압을 공작수사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섰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처리 논란과 관련해서도 여야간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한때 고교 동문 선배들 간 설전이 오가는 미묘한 장면도 연출됐다. 이날 광주·전남지역 의원 중 대정부 질문에 나선 김동철·황주홍 의원이 고교 선배인 김황식 국무총리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처리 과정의 몸통으로 지적하면서 자신사

퇴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김 총리는 후배들의 질타에 해명하느라 진땀을 뺐다. 포문은 김동철 의원이 열었다. 김 의원은 “식민지배·일본군 성노예 문제·독도문제 등 아직 풀리지 않은 한일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결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협정”이라며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를 건의하고 행정부를 대표해 총리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18일 민주당통합당 박준영, 손학규, 정세균, 조경태 후보(오른쪽부터) 등 대선 경선후보들이 대구 비엔나웨딩에서 열린 '대구시장 당원의 날' 행사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박준영 “참여정부 인사 대선 나서지 말아야”

“민주정권 넘겨준 실패한 정권”...문재인·김두관 공격

민주당 대선주자인 박준영 전 남지사가 18일 “참여정부 인사들은 이번 대선에 나서서는 안된다”며 당내 경쟁자인 문재인 상임고문과 김두관 전 경남지사를 공격했다. 박지사는 이날 오전 경인방송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기법입니다’에 출연해 “참여정부는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에게 500만표 이상으로 지면서 민주정권 10년을 넘겨준 실패한 정권”이라며 “참여정부 인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와서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리당 의장을 지낸 참여정부 출신이기 때문”이라고 지난 대선의 패인을 분석했다. 아울러 “참여정부에 관여했던 인사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지금은 전면에서 나설 것이 아니라 반성을 해야 한다”며 “문재인 의원을 비롯해 참여정부에 깊숙이 관여했던 분들이 국민의 심판을 받으러 나와서는 국민들의 지지를 못받고 당연히 본선에서도 승리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지사는 또 “참여정부 출신이 본선에 가면 지게 돼 있는 게임”이라며 “지금 여러 이유로 앞서가고 있지만 국민들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잘 생각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기부터 ‘기업 프렌들리’로 대표되는 대기업 중심 정책을 펴 서민생활이 어려워지고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비판한 뒤 “결론적으로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낮아지고 자살률이 높아지는 등 전반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데 상당히 미숙했다”고 평가했다. 박지사는 이에 앞서 17일 YTN에 출연해 “‘농부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미는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뜻으로 가장 정직하면서도 할 일을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안철수 교수에 대해서는 “젊은이에게 희망을 준 점에 대해 훌륭한 분으로 생각한다”면서 “안 교수도 자신이 추구하는 정책을 밝히고 이를 국민들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 합동연설회 등 대선후보 경선 규칙 변경 움직임

비박주자 4명 강력 반발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4명의 비박 주자는 18일 합동연설회 개최 회수를 포함한 경선 룰 변경 움직임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과 김태호 의원, 안상수 전 인천시장, 김문수 경기지사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당 경선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 입장을 의식한 경선 룰 변경을 즉각 중단하라”

고 촉구했다. 이는 당 경선관리위원회가 경선 선거운동 기간 총 13회의 합동연설회를 실시하려던 계획을 변경, 합동연설회를 6차례, 정책토론회·타운홀미팅을 7차례 각각 개최하는 방안을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후보는 “가급적 경선이 흥행되지 않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고 후보검증 기회를 원천

봉쇄하는 데 초점을 맞춰 기성천외환방식이 동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 경선위가 정책토론회 및 타운홀미팅의 토론주제와 참석범위를 제한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는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에 대한 당원과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2007년 경선 당시 도입한 대선후보 검증위원회도 슬그머니 사라

졌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경선 룰 변경에 강한 반대 입장을 나타낸 박근혜 후보 측이 대리인을 통해 경선위의 경선 룰 변경을 수용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최근 사당화 논란에 비취될 때 당과 박근혜 후보 측 간 모종의 사정 조율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비박 후보들을 대표해 이날 기자회견을 한 임태희 전 실장을 “결국 국민의 무관심 속에 사실상 박근혜 후보의 추대대회를 열려고 하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민간 인사에 국회의원 징계제소권

새누리 ‘윤리심사위’ 구성 강력 권한 주기로

새누리당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산하에 외부 민간 인사들로 ‘윤리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 국회의원 징계제소권 등 강력한 권한을 주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국회 쇄신 차원에서 ‘제식구 감싸기’ 비판을 받아온 윤리특위 정상화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홍일표 의원이 18일 의원총회에서 밝혔다. 당 윤리특위강화태스크포스(TF) 팀장인 홍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윤리특위 강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보고했다. 이 개정안은 윤리특위 산하에 외부 전문가 13명으로 윤리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윤리심사위는 윤리특위로부터 회부받은 징계안에 대해 조사 및 심사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자체적으로 ‘문제 의원’에 대한 징계까지 요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개정안은 윤리심사위의 객관성 및 독립성 보장을 위해 국회의장이 학

계·언론·법조·시민단체에서 각 한 명씩을 추천하고, 이들이 다시 25명씩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100명의 인재를 만든 뒤 이 가운데 추첨을 통해 13명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아울러 윤리특위의 능력조사 및 의결을 막기 위해 윤리심사위가 징계안 회부 및 징계 요구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권고안을 윤리특위에 제출토록 함과 동시에 윤리특위가 징계권고안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못박았다.

CS Korea재단 광주·전남본부 23일 출범

안철수 지지모임 전국화 시동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지지모임인 CS Korea재단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오는 23일 공식 출범한다. CSKorea재단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오는 23일 오후 7시 광주 서구 쌍촌동 5·18 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전국 8개 권역 지역본부 가운데 처음으로 창립대회를 갖는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창립대회에는 대학동아리 사물놀이와 문화행사에 이어 정창덕 고려대 교수의 ‘안철수 교수의 복지·정의·평화와 행복경제’란 제목이 주제발표가 펼쳐진다. 재단 측은 이날 행사에 문국현

전 유한킴벌리 대표 등 회원 3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단 측은 또 “안 교수는 공식 출마선언을 하지 않은 관계로 사전 선거운동의 저축을 받게 된다. 이번 행사에 불참한다”고 설명했다. 박석진 창립대회 추진위원장은 “안철수 교수의 가치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자발적 모임으로 CSKorea재단 광주전남 지역본부 출범한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for Hanuri Hospital Auction. Title: 전남 영암 하누리병원 경매물건. Includes details on auction date (2012.04.30), location, and contact info for the law firm.

Advertisement for NPL Investment. Title: 경매투자. Features: NPL 부실채권, 2시간 3개월 스터디, 교육비/임상활동비 등 회비 550만원. Contact: 오천경매 투자연구소.

Advertisement for 부실채권 (NPL). Title: 부실채권. Features: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각종공증문서, 대여금, 법원판결문, 운송료, 각종채권, 구상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Contact: 미래신용정보(주).